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송 광 운 광주 북구청장

#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 주력"

"올해는 경제 활성화와 선진형 복지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로 거듭나는데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송광운 광주시 북구청장은 10일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주민 모두가 잘사는 북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송 청장은 이를 위해 전통시장·전문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1시장 1주차장 조성'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생기업 서포터즈제운영·유망 STAR 중소기업 발굴 육성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송 청장은 또 지난해 착공한 북구 건강복지타운과 장애인 재활전문경원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민간자원을 연계한 협력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확대·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선진형 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 청장은 특히 구립 운암도서관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무등산 시가문화권·국립 5·18 민주묘지, 중외공원 문화벨트 등 자원을 활용해 문화관광을 육성하며 민주·인권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심혈을 쏟을 예정이다.

또 도심 속 폐·공가를 정비하고 자전거 타기 희망학교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학교·에너지절약 시범학교를 새롭게 운영하는 한편, 민·관·학이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전개해 '클린 북구'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도 역점을 둘 요량이다. 중흥동·임동·신안동 등 12개 지역의 도심재개발사업과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무등경기장 야구장과 동림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송 청장은 특히 "주민 중심 행정서비스와 주민 주도형 참여행정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구는 그동안 동네 한 바퀴 주부순찰단·북구 비전 365 오피니언 그룹·주부명예기자 운영 등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은 물론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역적응 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과 방과 후 아동 교육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2013년 이전 예정인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 상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무등산 수박·친환경 딸기 등 원예특작물 관광형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내놓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1시장 1주차장 조성

### '클린 북구 만들기' 최선

**민주주의 회복 1080배**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이후 정부·여당과 갈등 중인 조계종이 10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스님과 직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 행사를 열고 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지난달 14일부터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0일 결사'에 돌입해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108배 정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화·의료·교육 수도권 집중 막아라"

## 광주시, 2014년 KTX 개통 대응책 부심

## 원탁회의 구성·전략기획팀 상반기 구성

광주시가 2014년 호남고속철도 1단계(용산~광주) 구간 개통을 앞두고 승객과 물류를 선점하기 위한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로 'KTX 지역발전전략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KTX 개통에 따른 미래 변화에 대비할 전담조직까지 신설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10일 "2014년 말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경제와 문화, 교육 등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상되고 광주와 서울 간 치열한 경쟁체제가 예고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조기에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이 개통될 경우 서울~광주 간 소요시간이 예전에 비해 68분 단축된 1시간31분으로 줄어들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문화·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이 지역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지역 내 음식·숙박 등 질 높은 관광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지역 자체가 집산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중 광주발전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KTX 지역발전전략 원탁회의'를 구성해 호남고속철 개통에 따른 미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와 각 분야별 영향분석,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1·4분기 내에 호남고속철 개통에 따른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담조직 '전략기획연구팀(가칭)'도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보다 10년 앞선 지난 2004년 고속철도가 개통된 대구의 경우 개통 5년 서비스 이용 증가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의료·교육·유통 등 지역 내 수요 상당 부분이 쏠린 것으로 분석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주민투표 청구권자 광주 108만5058명

광주시는 10일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108만5058명이라고 공표했다.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총수는 108만4859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08만4356명으로 확정됐다.

이날 공표에 따라 주민투표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 총수의 17분의 1인 6만3827명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총수의 85분의 1인 1만2763명, 주민소환투표는 광역시장의 경우 총수의 100분의 10인 10만8436명, 시의회 의원의 경우 지역구 총수의 100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지리정보시스템 우수사이트 선정

광주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http://gis.gwangju.go.kr)이 한국웹접근성평가원 평가에서 우수 사이트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10일 "한국웹접근성평가원이 웹 접근성 평가 인증기준 11개 항목 22개 평가지표에 대한 검증을 거친 결과 95.2%의 높은 접근성 준수율을 보여 우수사이트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작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화면지원서비스 등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軍 가산점제 공론화… 찬반 논란일 듯

## 국방부, 4월까지 도입 목표 설득 나서

국방부가 연초부터 군복무가산점제(군가산점제) 도입 관철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4월까지를 목표로 군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반대 단체의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연초부터 이 제도 도입 여부가 공론화되고 있다.

작년 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도 군가산점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단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연초부터 군가산점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천안함 격침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병역의무 이행으로 헌신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정서가 사회 저변으로 확산하면서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는 현실 인식도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병무청이 지난 2009년 11~12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3.0%가 군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군가산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008년 12월2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도 본인 득점의 2.5% 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 합격자가 전체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가산점 부여 횟수를 3~6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선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국회 등을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등은 군가산점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마친 젊은이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개성공단도 돼지·쇠고기 반입 금지

## 구제역·AI 여파… 정부, 북과 수입산 육류 반입 협의

국내에서 확산 중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의 개성공단 반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검역소는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산되자 작년 말 국내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개성공단 내 반입 금지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부터 국내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개성공단 반입이 전면 중단됐다.

북측은 작년 1월에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돼지고기와 쇠고기 반입을 중단했으며, 같은 해 10월 관련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북측은 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이유로 지난해 11월께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닭고기 반입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산 육류 대신 청정지역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의 개성공단 반입을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에 반입된 육류는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물론 북측 근로자의 부식으로 제공돼 왔다.

/연합뉴스